



## 독일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 I. 개정 대상

법령명	국제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법 (Gesetz zur Bekä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약칭	테러리즘 척결법 (Terrorismusbekämpfungsgesetz: TerrorBekämpfG)
최초 제정일	2002년 1월 9일
최종 개정일	2007년 1월 5일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 (Terrorismusbekämpfungsergänzungsgesetz)으로 개정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국내와 국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테러의 척결을 위한 안티 테러법으로써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후에 제정되었다.</li> <li>- 연방법 (Bundesgesetz), 행정법 (Verwaltungsrecht)</li> <li>-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여러 종류의 법들을 개정한 법으로, 조합법률 (Artikelgesetz)로 명명되기도 한다. 조합법률이란 명칭은 여러 법들을 개정하여 하나의 법 속에 합쳐 놓은 법으로, 개정된 각각의 법들이 이 법의 각 조에서 기술된 데서 연유한 것이다.</li> <li>- 예를 들어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 제1조에는 연방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제3조에는 군사정보부법 (MAD-Gesetz), 제4조에는 해외정보 담당정보부법 (BND-Gesetz), 제6조에는 안전점검법 (Sicherheitsüberprüfungsgesetz), 제7조에는 쉐엔너협약에 관한 법 (Gesetz zu dem Schengener Übereinkommen von 19. Juni. 1990), 제8조에는 관세행정법 (Artikel 8: Zollverwaltungsgesetz), 제9조에는 도로교통법 (Artikel 9 : Straßenverkehrsgesetz)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다.</li> </ul>



## II. 보완 입법 배경과 그 경위

### 1. 보완 입법 배경

테러리즘은 장기적인 위협이므로,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적절한 법적 수단 역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2002년 1월 9일 제정된 테러리즘 척결법 (Terror-BekämpfungG)에는 한시(2007년 1월 11일 까지만 유효) 규정들이 들어 있었다. 관련된 규정들은 대부분 국가기관의 비밀 정보 업무와 관련한 규정들이었다.

연방정부와 하원(Parlament)의 감독위원회 (Kontrollgremium)는 테러리즘 척결법 (TerrorBekämpfungG)이 제정된 후, 수년에 걸쳐 이 법 제정의 성과에 관한 평가작업을 해왔다. 특히 하원의 감독위원회는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인 IMSI-Catcher (Handy 등 모바일통신의 감시를 위해 투입될 수 있는 장비)의 사용에 대한 조사 평가를 담당했다.

조사 평가를 통해 국가 안전기획부서들이 법 제정 이후 업무를 성공적이며, 책임감있게 수행했음을 확인하였다(이 법에 입각한 정보작전을 통해 독일 정보기관들은 Hamas 단체의 자금 조달 루트를 파악하고, AlAqsa 테러 집단의 모금 운동을 금지시켰으며, 아랍 무자헤딘의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등 테러 방지에 성공적으로 기여하였고, 정보기관들은 지난 3년 간 관련 정보취급권한을 총 99번만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책임감있게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조사 평가 결과 테러리즘 척결법 규정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용시킬 필요

성과 국가 정보기관들(Sicherheitsbehörde)의 정보취급권한(Auskunfiftbefugnis) 규정을 현실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 방향

테러리즘 척결법의 평가 결과 이 법을 다음 3가지 방식으로 보완 발전시킨다.

- ① 테러리즘 척결법 내 효과가 입증된 기한부 규정들을 연장 시행할 것.
- ② 테러리즘 척결법 시행 후 평가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
- ③ 테러리즘 척결법을 보완하는 규정들을 제정 : 독일 정부는 특별법 (예: 경찰과 정보부의 정보 공유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테러리즘 척결 조치를 더욱 발전시키려고 시도 중이다. 테러리즘 척결법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개선책은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 제정을 통해 구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때 특별법 제정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미미한 개선은 이 보완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3. 개정 입법 경위

시기	진행 경과	비 고
2002. 01. 09.	테러리즘 척결법(Terrorismusbekämpfungsgesetz) 제정	
2006. 07. 12.	독일 연방 정부의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 (Terrorismusbekämpfungsergänzungsgesetz) 입법안 확정	
2007. 01. 05.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 제정	
2007. 01. 11.	테러리즘 척결법의 일부 조항 효력 상실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 발효	

## III. 주요 내용

### 1.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 제정을 통해 그 적용이 연장되는 내용 및 법률

구 테러리즘 척결법에 포함되어 있던 다음 내용들과 관련법들은 앞으로도 그 적용이 연장된다.

내 용	관 련 법
1. BfV (연방 정보부)와 MAD(군사정보부)는 국가간 이해를 저해 (völkerverständigungswidrig)하려는 시도에 대한 관찰임무를 수행한다.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 MAD-Gesetz
2. 독일 국가 정보기관들은 특정 정보취급권 (bestimmte Auskunftsbeugnisse)을 가진다:  BfV(연방정보부), MAD(군사정보부), BND(해외담당정보부)는 정보통신업 기업들로부터 통신 연결 및 사용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BfV(연방정보부)와 BND(해외담당정보부)는 추가로 은행 등에 예금 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BfV(연방정보부)는 더 나아가 우체국에 대해서 사서함과 기타 우편 연락에 관한 정보사용권을, 그리고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정보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 MAD-Gesetz, BND-Gesetz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 BND-Gesetz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
3. 정보기관들은 IMSI-Catcher 사용권을 가지며, 이로써 이동통신 연결위치, 장치 및 카드 번호를 조사할 수 있다.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 MAD-Gesetz, BND-Gesetz



4. 연방 이민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BAMF)은 BfV(연방정보부)에 광범위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진다.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
5. 국내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안전지대(militärische Sicherheitszone)와 생명과 국가안보에 중요한 시설들 내 안전취약 지역에 대한 사보타지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조치를 마련한다.	Sicherheitsüberprüfungs-gesetz
6. 연방수사국(BKA)의 수사절차를 간소화한다. BKA 가 수사목적으로 보유 정보를 보완해야만 하는 경우 다른 경찰관서에 의뢰없이 경찰 관서가 아닌 곳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BAK-Gesetz 제 2 조 제 7 항

## 2. 개정 및 보완된 내용

그동안 은행, 항공사, 우체국, 통신업 종사업체들의 정보제공의무는 (정보제공을 통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중대성(Eingriffsgewicht) 정도에 상응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비행기 예약에 관한 간단한 정보 수집 시에도 전화 감시 허가를 받기 위한 지시 절차(Anordnungsverfahren)를 밟아야 했다. 즉, 연방 정보부(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부장이 정보수집 허가 신청서를 내면, 내무부가 허가 지시를 내리고, 내무부는 이를 위해 G 10 Kommission(서신, 우편, 통신의 비밀과 관련한 정보기관의 침해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 결정하는 독립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때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은 그 경미한 침해 정도에 비추어 부당할 정도로 높다. 따라서 서신과 통신의 비밀보장에 대한 침해를 위해 마련된 허가 절차는 서신과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 사안에만 국한하여 적용키로 한다. 그러나 은행 정보 취급권은 계속 내무부 소관으로 남겨둔다.

또한 정보취득을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전제 조건도 지금까지는 일률적이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통화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화도청시 필요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정보기관의 통화자 확인 정보 취득권은 구체적인 범죄모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 밖의 중대한 위협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도 허용한다.

범죄 혐의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은행의 정보 제공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현재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비교적 경미한 침해에 해당되지만 금융정보 수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방 금융감독원 소재 계좌정보에 대한 문의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를 수정, 앞으로는 연방 금융감독원에 보관되고 있는 계좌원장에 대한 정보 역시 정보기관에 제공할 것을 규정한다.

정보기관의 정보취급권한 확장 : 이전의 테러리즘 척결법에 따르면 MAD(군사정보부)에는 정보통신업체, BND(해외담당 정보부)에는 은행정보취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각 정보기관들의 필요성의 차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MAD(군사정보부)는 국방부의 업무영역 중 반국가활동억제업무(Verfassungsschutzaufgabe)를 맡고 있으며, 이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BfV(연방정보부)와 동일한 정보취급권이 필요하다.

BND(해외담당정보기관) 역시 임무수행상 항공사가 보유한 고객의 여행 정보를 이용 혐의자의 국제적 연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의 필요성에 상응하여 관련된 정보취급권을 BND(해외담당정보부)와 MAD(군사정보부)에도 부여하기로 한다.

정보기관들의 정보취급권은 지금까지 테러조직의 네트워크와 금융거래 통로의 수사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반국가사범에 대해서는 대외적 이해관계 또는 국가간 협조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취급권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BfV(연방정보부)와 MAD(군사정보부)는 중대한 위협이면서 폭력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극단주의적 움직임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 정보취급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써 자생적인 테러주의 척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국경 수배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수사기관은 혐의자를 수배할 수 있다. 그리고 출입국 검사대에 수배인물이 나타난 경우 이 사실은 수배의뢰 기관에 알려지므로 혐의자들의 국제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Schengener 시행협약에 따라 유럽연합 내 국경 검사가 사라지면서 출입국 검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Schengener 시행 협약에 근거 Schengener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상당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정보

기관에 혐의자를 수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은 지금까지 이 Schengener 정보 시스템을 정보기관 업무에도 시행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 이러한 보안상의 허점을 메우는 조치를 취한다. 정보기관들은 앞으로 상당한 위협 요인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처럼 혐의자의 출입국 감시를 위해 수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유럽 지역에 걸친 비밀 수사를 위해 수배할 수 있다. 수배된 혐의자가 경찰 검문에 걸리게 되면 수배 정보기관에 그 사실이 통보된다.

수사기관들은 중앙 차량 등록처의 차량과 소유자의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재래의 문의절차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정보기관의 임무 수행이 제한을 받고 있다. 즉, 정보기관의 차량 감시와 같은 임무는 관련정부기관 KBA(Kraftfahrtbundesamt)의 근무시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관련부서 일과 후에도 관련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조회 가능성을 허용하도록 한다.

세관은 자금 세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혐의 수사를 위해 돈을 압수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 압수 권한을 이제 테러리즘 자금지원에도 적용시킨다.

개정된 테러리즘 척결 보완 입법은 모든 규정들의 효력을 5년간으로 제한할 것과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 규정들의 효과에 대해서 새로이 평가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조사 평가는 하원의 협조 하에 외부 전문가를 통해 행할 것과 정보기관들의 정보취급권과 IMSI-Catcher 사용에 대한 평가는 하원의 감독위원회를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



#### IV. 테러리즘 척결법 보완입법의 기대 효과

기존 테러리즘 척결법 시행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규정들을 계속 시행하고, 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결함들을 법의 개정 또는 보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관들이 테러리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V. 관련 참고 인터넷 사이트: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

- ▶ 자료 1: 테러리즘 척결법 (Gesetz zur Bekä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Terrorismusbekämpfungsgesetz-Terror-BekämpfG)  
<http://www.buzer.de/gesetz/4197/index.htm>
- ▶ 자료 2: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 (Gesetz zur Ergänzung des Terrorismusbekämpfungsgesetzes(Terrorismusbekämpfungsergänzungsgesetz)  
<http://www.buzer.de/gesetz/7588/index.htm>
- ▶ 자료 3: 테러리즘 척결법 평가보고서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06/07/\\_\\_\\_Anlagen/terrorismusbekaempfungsgesetz-bericht-breg,property=publicationFile.pdf](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06/07/___Anlagen/terrorismusbekaempfungsgesetz-bericht-breg,property=publicationFile.pdf)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06/07/\\_\\_\\_Anlagen/terrorismusbekaempfungsgesetz-evaluierung,property=publicationFile.pdf](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06/07/___Anlagen/terrorismusbekaempfungsgesetz-evaluierung,property=publicationFile.pdf)

- ▶ 자료 4 : 내무부의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 홍보자료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06/07/\\_\\_\\_Anlagen/Terrorismusbekaempfungsergaenzungsgesetz,property=publicationFile.pdf](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06/07/___Anlagen/Terrorismusbekaempfungsergaenzungsgesetz,property=publicationFile.pdf)

- ▶ 자료 5 : 정부 보도자료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06/07/2006-07-12-terrorismusbekaempfungsgesetz-ist-ein-erfolg.html>  
[http://www.bundesregierung.de/nn\\_774/Content/DE/Pressemitteilungen/BMI/2007/01/2007-01-10-terrorismusbekaempfungsergaenzungsgesetz-tritt-morgen-in-kraft.html](http://www.bundesregierung.de/nn_774/Content/DE/Pressemitteilungen/BMI/2007/01/2007-01-10-terrorismusbekaempfungsergaenzungsgesetz-tritt-morgen-in-kraft.html)

#### 약자

- \* BfV :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국내 반 국가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연방 정보부
- \* BND : Der Bundesnachrichtendienst, 연방 군사 정보부
- \* BNK : Bundeskriminalamt, 해외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연방 정보부
- \* MAD: Der Militärische Abschirmdienst, 연방 수사국

오윤섭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